

“가족이 더 무서워”... 잇단 가족간 범죄 ‘씹쓸한 자화상’

부부싸움 끝 6개월 딸 15층서 던진 엄마...“행실 못마땅” 며느리 살해 기도 “반찬에 약 탔나” 사실혼 여성 살인 미수...계모와 상속재산 다툼 벌인 아들 광주·전남서 잇단 가정 불화 범죄로 이어지며 “가정 해체 우려” 목소리

광주·전남에서 가정불화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가정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고용 불안, 치열한 경쟁에서 쌓인 불안과 분노가 가정으로 향하는 극단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세대뿐 아니라 부부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결국 가정이 범죄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장벽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자신의 아이를 장벽

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남편과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울증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투심에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화순에서 B(74)씨가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 C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헤어졌고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C씨의 집에 침입해 옷 등을 망가뜨려 벌금

까지 냈었다. 다시 관계를 회복했지만 B씨는 C씨가 다른 남성과 어울린다는 반찬에 약을 타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해 반찬통을 마당에 집어 던졌다.

이후 B씨는 둔기와 인화성 물질을 챙겨 C씨의 집에 찾아가 독극물을 마시고 수차례 C씨에게 둔기 등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B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면서 “C씨가 사망에 이르는 않았으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에는 광주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사건도 있었다.

D(75)씨는 아들의 결혼 초기부터 40대 며느리 E씨의 말투와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D씨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2채를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줬으나 “가까운 곳에 살면서 18년 동안 먼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해 왔다.

지난 8월 아들 집을 방문한 D씨는 아들에게 재차 이혼을 권유했으나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나 흥분을 구입해 며느리가 살고 있는 광주시 모아파트를 찾아갔다.

8분 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주변에서 1시간 동안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재판부는 살인예비죄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E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D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챙기기 위해 계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F(39)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가 중장비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상속재산 문제로 계모인 G(56)씨와 다투었다.

G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F씨는 아버지가 사육하던 염소 500마리를 점유할 목적으로 축

사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또 F씨는 지난 3월 고급 외제차량이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돼 있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G씨에게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차량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워 30분 동안 운행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F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가정불화가 잇따라 범죄로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교류 단절로 인해 가족이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는 진단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 문제, 불화, 고물가 등 개인적 어려움으로 우리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등 황폐한 모습은 각박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가족 구성원의 유대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 다양해요 4일 광주시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관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테마별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무용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 재수사

광주경찰청, 탈락자 다시 고발장 제출 따라 착수

‘중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 탈락자 A씨가 다시 고발장을 제출해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존에 고발이 진행돼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최근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고발장을 다시 냈다.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데 따른

다음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A씨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조선대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된 사건이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나왔거나 중요 사안이 변경돼 재고발이 되면 수사대상이 된다”면서 “재판부가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2단계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부분을 A씨가 새로운 증거로 보고 고발장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A씨에게 일부 패소한 조선대는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안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신안군의 어업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9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의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어선은 어구에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표기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 밤 12시 40분께에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107km 해상에서 어구를 설치해 놓고 허

가받은 조업 수역을 이탈한 중국 어선 한 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101척을 나포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선수 성비위 파악 못한 전남도체육회, 뒤늦게 징계 착수

전남도체육회가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된 자치단체 선수의 성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광주시 서구의 한 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옆을 지나는 여중생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사람을 잘못 봤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

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제3의 인물이 추행했을 개연성도 없다”고 봤다.

A씨는 성범죄로 입건돼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고 소속 팀을 옮겨 정상적으로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

전남도체육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선수 개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비위를 알 수 없다”면서 “A씨의 감독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A씨 변호사로부터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도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아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